

위탁 2012-1

학자금지원 정책효과성 분석 및 학자금부담지수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임천순 (세종대)



위탁 2012-1

학자금지원 정책효과성 분석 및 학자금부담지수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임천순 (세종대학교)

공동연구원 : 고장완 (성균관대학교)

김진영 (건국대학교)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학자금지원 정책효과성 분석 및 학자금 부담지수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02. 28

- 주관연구기관명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기 간 : 2012.05.03 ~ 2013.02.28
- 주관연구책임자 : 임천순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 1.
학자금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책임자 : 임천순(세종대학교)

공동연구원 : 우명숙(한국교원대학교)
김지하(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조원 : 이정숙(세종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학자금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를 고등교육기회 확대,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업몰입, 고등교육 관련 성과로서의 학업성취 및 대학만족도, 학업 지속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학자금 지원을 경험한 수요 집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의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자금 지원 유형을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의 두 유형으로 나눈 후 각 유형별 참여 여부 및 지원액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학자금 지원 유형별로 하위 세부 정책에 참여하는 개인 특성 및 그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금 재정지원 정책이 의도한대로 수혜대상 대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핌으로써, 상대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피기 위해 학자금 지원의 유형 및 하위 세부 정책별로 대학생들의 학업몰입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여부,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육 관련 변수인 대학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학업지속과 관련하여 휴학 여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효과 변수들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아르바이트 여부 및 휴학 여부에 대한 분석은 로짓모형, 아르바이트 소득은 토빗모형,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는 일반최소자승모형, 대학만족도에 대한

효과 분석은 서열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되, 학자금 지원 유형별 하위 세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경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하여 학자금 지원 관련 정책에의 참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관찰가능한 특성 차이를 통제한 후,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학자금 지원 수혜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학자금 지원유형별로 수요자 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은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대학생들에게 지원 확률을 높이거나, 지원 액수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즉, 정책 취지대로 대학생이 속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의 참여 확률 및 장학금·학자금 수혜액이 모두 증가하며, 부모의 평균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학금 지원 확률 및 장학금 지원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이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및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장학금 지원 유형의 하위 정책별로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요 집단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 가계곤란·근로장학금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수혜 확률 및 수혜 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계곤란·근로장학금 지급이 정책목표대상에게 취지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유형의 하위 정책별로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요 집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 취약 계층의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확률 및 대출 수혜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

석 결과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하여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및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자금 지원 정책과 학업몰입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참여 여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는 장학금, 특히 성적우수장학금 지원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학업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아르바이트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지원 정책의 대학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제고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학금, 특히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자금 지원 정책 중 장학금 지원 정책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성취 수준 제고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정책의 학업지속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학금 특히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휴학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자금 지원 정책 중 장학금 지원정책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학자금 지원 수혜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수혜한 대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수준 제고, 학업집중도, 아르바이트 시간 경감, 휴학 방지, 역량 개발, 학비부담 경감,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장학금 지원정책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성취 수준 제고, 학업집중도, 아르바이트 시간 경감, 학비부담 경감, 인재 양성, 학업지속,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학자금 대출 정책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자금 지원 정책은 수혜 대학생들의 인식 상으로도 이미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대학생들의 학업몰입, 대학 교육과정, 학업지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정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석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학자금 대출정책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학업 몰입 및 학업지속, 고등교육의 과정 측면에서는 장학금 지원 정책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에는 든든학자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학자금 대출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학자금 지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 2.
학자금지원 효과성 지수
개발

연구책임자 : 임천순(세종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김진영(건국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정부 재정에 의해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 고등교육인력양성,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 제고의 형평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출된 지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세 개의 지수, 학자금부담경감지수, 인재양성 효과지수, 교육형평성제고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학자금 부담 경감지수는 2005년 이후 상당 기간의 자료가 축적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별 평균 가구 소득’ 대비 ‘학자금 대출액수’의 비율을 도출한 후, 소득분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 선정에 따른 지수값의 편차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든든학자금 대출 사업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방식의 학자금 부담 경감지수를 산출해보았다.

인재양성 효과지수는 개념적으로 대출자들이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대학 재학 시 거둔 성적 자료를 통하여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졸업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나타내는 임금 관련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당시의 성적분포를 통해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인재양성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100점으로 환산한 대학 학점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학자금 대출자들의 비율과, 80~90점 및 70~80점을 받은 학자금 대출자의 비율을 인재양성 지수로 삼아 2005년 이후 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교육형평성 제고지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각각의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십분위분배율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교육형평성 제고지수는 소득 기준 비소외계층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소외계층의 학자금 대출액 비율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장학금 지원의 형평성 제고지수는 우수 학생 장학사업과 기부금 장학사업 지원액의 합계(기타 장학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액의 비율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한 세 가지 지수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정책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학자금 지원 정책의 실제 학자금 부담 경감효과는 상당히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연도와 관계없이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대비 학자금 대출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의 학자금 부담 경감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인재양성지수에 기반한 분석 결과 90점 이상의 상위 성적을 거둔 대출자의 비중과 70~80점 사이의 하위 성적을 거둔 대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80~90점 사이의 중간 계층은 줄어드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자금 대출의 인재 양성 효과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90점 이상의 높은 학점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80-90점 사이의 대출자 비중이 줄어들며, 70-80점 사이의 대출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분명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조사 수집하여 활용한 원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형평성제고지수에 따르면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과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 정책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형평성 제

고 효과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약 11.8%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정책의 교육형평성 제고효과는 2008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8년 대비 2011년의 장학금 지원에 따른 교육형평성 수준은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 지원 정책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효과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학자금 지원정책이 교육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임과 동시에 예비적이다. 연구의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에 기인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지원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총합자료(aggreated data)이며 기초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의해서만 수혜인원 및 지원 총액이 구분되어 있어 피지원자집단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득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양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는 또한 예비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수를 통한 완벽한 측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측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와 같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차년도에 걸친 지수 값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인 학자금지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

주제 3.
고등교육재정분담구조

연구책임자 : 임천순(세종대학교)

공동연구원 : 고장완(성균관대학교)

요 약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에 있어서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정부투자, 대학의 자체재원 조달 능력 미흡,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기부문화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높으며, 이와 반대로 등록금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다. 바람직한 고등교육재정 분담은 어느 한 주체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균형 있게 분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재정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분담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 특히 미국, 영국과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재정 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바람직한 분담 구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

교육재정의 분담에 관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의 책임미흡과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과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미흡을 들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원의 확보와 배분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운영되고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재정 책임 과중으로, 현행 교육재정 분담 구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부담한 후, 모자라는 부분은 모두 학부모 책임으로 전가하는 구조다. 이밖에도 자체재원 발굴이 미흡하고 기부금과 연구개발비 등 민간기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재정분담 구조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수입구조는 크게 등록금,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지원, 기부금 및 교부금, 부가사업, 병원수익, 재투자 수익, 그리고 기타 재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립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전체 교육비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이며, 정부의 부담은 42.1%(연방정부 15.6%, 주정부 22.6%, 지방정부 3.9%)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는 부가사업에 의한 수익은 8.1%로 나타났으며, 자산의 재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이 3.9%, 그리고 기부금 및 교부금이 2.3% 이었다. 그밖에 병원수익과 교육활동비 등으로부터 얻은 기타 수익은 24.8%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2009년 현재 전체 교육재정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비중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13.6%를 차지하였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1.3%에 그치고 있다. 사립대학에서 등록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투자수익으로 전체 교육재정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 및 교부금이 10.7%로 나타났으며, 부가사업에 의한 수익도 8.4%에 달하였다.

전체 교육비 중 부담 주체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등록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립대학의 경우 2009년 현재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40%가 넘는 정부 지원 비중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정도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낮은 대신 채투자수익과 기부금 수익, 자체수익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립대학의 경우는 주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었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채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었다. 이는 모두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영국 고등교육의 재정분담 구조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구조는 크게 정부지원금, 학비, 연구 활동비, 기부금 및 투자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2010-2011 학년도의 경우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총 재정 규모는 약 276억 파운드로 이중 정부 지원금은 전체재정 규모의 32.2%에 해당하는 88.8억 파운드 정도였고, 학생들이 부담한 학비는 정부 지원금 보다 조금 많은 89.7억 파운드로 전체의 약 32.6%를 차지하였다. 2012-2013 학년도부터 도입된 학비인상은 종전의 재정구조에서 정부가 부담하던 고등 교육비를 대체하게 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부담률이 50%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고등교육 재정분담은 따라서 지난 10여년 간 전적인 정부부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도 학비부담을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1998년 처음 도입된 학비정책이 2012-2013 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비는 전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는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정부의 역할과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와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분담 구조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정부가 고등교육 기관들의 재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고등교육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특히 연구 강국으로서의 스웨덴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정부의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고등교육 성장이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발전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스웨덴의 고등교육 재정 방식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웨덴이 북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한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계속 커지고 있는 세계 유학생 시장을 겨냥하여 앞으로 어떤 고등교육 정책을 마련해갈 지 유학생 학비 정책이 국내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특히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에 맞는 고등교육 재정구조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지 주목된다.

핀란드의 경우는 국가발전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문과 실용을 다 같이 중시하는 고등교육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규모가 작고 직종 간 임금격차가 적은 핀란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용학문 분야에서도 연구와 대학원 과정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교육과 질을 높이고 이런 노력들이 국가발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핀란드도 다른 EU국가들과 같이 고등교육 정책에서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들을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한편,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은 정부재원이 2008년에 68.9%로 우리나라(22.3%)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정부재원이 2000년에도 낮고 2008년에는 오히려 악화된 경우이고 미국은 그나마 2000년보다는 개선되어 2008년 정부 재원이 모두 37.4%로 향상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는 2000년(84.4%)과 2008년(81.7%) 모두 정부재원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2006년 학비상한을 인상한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66.7%에서 2008년 34.5%로 크게 낮아졌다.

고등교육재정 분담 구조개선 방안

OECD 선진 국가들의 고등교육 재정 분담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분담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면 크게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자체 재원 확대,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재정분담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부담 비중은 영국이 34.5%, 미국 37.4%로 나타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80%가 넘고 있다. 고등교육재원에서 민간부담이 높은 일본의 경우도 정부부담은 33.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부담은 22.3%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3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정부부담 비중이 약 10% 정도 증가하여야 한다.

둘째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완화이다. 낮은 정부부담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부담의 또 다른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국가 재원의 확충이며, 그 다음으로 장학금 및 용자의 확충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국가장학금의 대폭적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자체 재원 확대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자체 수입은 전체 운영비에 있어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일부 대학의 경우 자체적으로 부가

사업을 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얻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체 수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경우 대학들이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담의 확대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서 민간부담 확대는 기부금의 활성화와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먼저 기부금 확충을 위하여 대학의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담 확대 방안 중 또 하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각종 재원 확보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연구개발비의 유치이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확대를 통해서도 민간재원을 유치할 수 있다. 즉 지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등과 협력하여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추가적인 등록금 수익이나 취업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